Jeju Peace Institute 제주평화연구원

JPI PeaceNet

경계선 위의 협력: 동북아 AI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과제

문 인 철

서울연구원 AI빅데이터랩 연구위원

[기획자 註]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국경을 넘나들며 새로운 안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AI를 둘러싼 국제협력은 미국 주도의 팍스 실리카(Pax Silica)와 중국 주도의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로 갈라지며 미중 갈등의 또 다른 축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고는 진영이 맞닿고 군사적 대치가 이어지는 동북아시아에서 AI 거버넌스가 왜 필요한지 살펴본다. 아울러 AI사고 통보와 위협 정보 공유처럼 진영을 넘어 협력할 수 있는 AI 위험관리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과제를 제시한다. [기획: 고경민 연구실장(kmkolej@jpi.or.kr)]

*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Ⅰ. 국경을 넘는 AI 위험, 둘로 갈라지는 협력

2026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 7개 금융사가 잇따라 해킹 피해를 확인했다. 이들 금융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6만 8천여 건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같은 공격자가 AI 도구를 악용해 여러 금융사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공격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공격자는 IP 주소를 바꿔가며 공격했다. 공격에 쓰인 IP의 소재지는 미국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12개국에 달했다. 공격 서버에서는 중국어 기반 오픈소스 AI 침투테스트 도구의 흔적도 확인됐다.[1)]

이 사건은 AI의 위험이 이미 국경을 넘는 안보 문제가 되었음을 보여 준다. 문제는 AI의 위험이 사람의 악용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유엔 'AI 독립 국제 과학 패널'의 공동의장인 요슈아 벤지오(Yoshua Bengio)는 2026년 7월 패널의 첫 보고서를 내면서 이 점을 경고했다. 그는 능력이 계속 커지는 AI가 파국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것을 지금의 과학으로는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2)]

그러나 AI를 둘러싼 국제협력은 오히려 둘로 갈라지고 있다. 미국은 2025년 12월 동맹국·우방국과 함께 AI 공급망 협의체인 '팍스 실리카(Pax Silica)'를 출범시켰다. 중국도 2026년 7월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를 세웠다. 동북아시아(이하 동북아)는 이 갈라짐의 한가운데에 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틀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틀을 이끌고 있다. 그런데 두 진영이 맞닿는 이 경계선 주변에는 군사적 대치선도 몰려 있다. 한반도의 군사분계선과 대만해협, 동중국해가 바로

1) 김은성, "은행은 왜 AI해킹의 먹잇감이 됐나?", 「주간경향」, 2026.10.12; 고성표, "'국가 바꿔가며 AI로 공격'…금융권 덮친 '동일 IP' 해킹 비상", 「중앙일보」, 2026.10.4.

2) UN News, "Global push for AI governance amid warnings of 'catastrophic harm'", 2026.7.5.

그곳이다. 이러한 곳에서 AI가 군사적 판단에 쓰이면 작은 오판도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다. 동북아에서 AI 위험이 곧 지역 평화의 문제가 되는 까닭이다.

이 글은 동북아 차원에서 'AI 거버넌스'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고,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거버넌스의 뜻을 짚어 둘 필요가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로즈노(James N. Rosenau)는 거버넌스를 공유된 목표에 기초한 활동으로 정의했다. 그에 따르면 이 활동은 반드시 법적 권한에서 나오거나 강제력에 기대지 않는다.[3] 따라서 거버넌스는 공식 기구가 없어도 작동할 수 있다. 거버넌스는 다자협력과도 구별된다. 다자협력은 국가들이 모여 협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거버넌스는 그 과정에서 형성되어 행위자들을 실제로 움직이는 규범과 관행까지 아우른다. 이 차이는 동북아에서 특히 중요하다. 동북아에는 AI 위험을 다룰 지역 기구가 없다. 한·중·일 정상회의마저 멈춰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글이 말하는 동북아 AI 거버넌스는 역내 국가들이 기존 협의체 안에서 쌓아 가는 AI 위험관리의 규범과 관행이다. 그 핵심은 'AI사고'를 알리고 오판을 막는 일이다. 이러한 위험관리는 어느 진영에도 손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영역의 협력은 역내 긴장을 낮추고, 진영 선택의 압박 속에서 한국의 외교 공간을 지키고 넓히는 길이 될 수 있다.

II. 진영으로 나뉘는 국제 AI 거버넌스

1. 팍스 실리카와 WAICO: 공급망을 가르는 두 개의 틀

국제 AI 거버넌스에는 아직 중심이 되는 기구가 없다. 대신 성격이 다른 협의체들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특히, 공급망과 기술 협력에서는 진영이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2025년 12월 팍스 실리카에 창립 회원으로 참여했다. 미국은 이 협의체를 강압에 취약한 공급망 의존을 줄이는 장치라고 설명한다. 다만, 팍스 실리카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조약이라기보다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는 틀에 가깝다. 출범 이후 회원국은 2026년 6월 2차 정상회의 무렵 24개국으로 늘었다.[4]

중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 2026년 7월 16일 상하이에서는 러시아와 브라질 등 29개국이 WAICO 설립 협정에 서명했다. 한국은 WAICO에 참여하지 않았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과의 AI 연대를 강하게 희망한다. 그러나 그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관계를 고려해야 하므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5]

그렇다고 아직 두 틀의 경계가 굳어진 것은 아니다. 양쪽과 동시에 관계를 이어 가려는 나라들이 있기 때

3) James N. Rosenau, "Governance, Orde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in James N. Rosenau and Ernst-Otto Czempiel (eds.),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Orde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p.1-29.

4) 김수정, "팍스 실리카(Pax Silica) 출범과 핵심광물 공급망 혁신방안", 『이슈와 논점』 제2471호 (국회입법조사처, 2026); 외교부, "김진아 2차관, '제2차 팍스 실리카 서밋' 참석", 보도자료, 2026.6.27.

5) 이기범, "배경훈 '中, 韓과 AI 연대 강력 희망…쉽게 결정 어려워'", 「뉴스1」, 2026.7.20.

문이다. 미국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나라들을 '글로벌 스윙 국가'라고 부른다. CNAS가 꼽은 여섯 나라 가운데 브라질과 인도네시아가 WAICO 창립 회원국이 되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대규모 국방 협력을 발표하고 몇 달 뒤 WAICO에 가입했다. WAICO 창립 회원국인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 보좌관도 미국과 중국의 AI 기술 모두에 접근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6)]

미국은 이러한 흐름을 경계하고 있다. 2026년 8월에는 미국이 2차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서명한 35개국에 서한을 보내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한 초안은 미국의 기대와 상충하는 협의체의 회원 자격을 동시에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초안은 '모든 곳에 속하겠다'는 것이 결국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까지 경고했다. 언론은 이 서한이 두 틀에 모두 가입한 카자흐스탄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했다.[7)]

AI를 규율하는 방식은 진영과 관계없이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은 2025년 7월 'AI 행동계획'에서 규제 완화와 신속한 개발을 앞세웠다. 한국은 포괄적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했다. 일본은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중국은 2025년 9월 시행된 「인공지능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 방법」처럼 국가가 세부 규칙을 직접 정하고 집행한다.[8)] 규칙이 이렇게 다르면 서로의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기관은 같은 AI 시스템을 두고 각기 다른 기준을 맞춰야 한다.

2. 이어지는 미중 대화, 위축되는 군사 AI 논의

진영이 갈라졌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AI 대화까지 끊긴 것은 아니다. 2024년 11월 페루 리마 APEC 정상회의 기간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핵무기 사용 결정을 AI가 아닌 인간이 통제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9)] 이듬해 11월 경주 APEC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21개 회원이 'AI 이니셔티브'를 채택했다. 대화는 2026년 들어 한층 구체화되었다. 그해 9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AI의 위험과 혜택을 논의할 대화 틀과 AI사고 발생 시 소통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다만, 어떤 사고를 공유하고 언제 통보할지와 같은 운영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10)]

---

6) Richard Fontaine and Gibbs McKinley, "Global Swing States and the New Great Power Competition", CNAS, 2025; CSIS, "The State of AI Global Governanc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U.S.-China Summit", 2026.9; Eurasianet, "US effort to pressure Central Asian states on AI development falling flat", 2026.8.26.

7) 김승욱, "美 '중국 AI 동참하지마'…韓 등 35개국에 '양다리 불가' 경고", 「연합뉴스」, 2026.8.15.

8) The White House, 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 2025.7.2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20676호, 2026.1.22 시행); Japanese Law Translation, Act on Promo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Technology (Act No. 53 of 2025); Loeb & Loeb, "China's AI-Labeling Measures and Mandatory National Standards Take Effect September 1", 2025.3.

9) Asma Khalid, "Biden and Xi take a first step to limit AI and nuclear decisions at their last meeting", *NPR*, 2024.11.16.

10) 정목희, "트럼프·시진핑, AI대화채널 구축 합의…'국제수로 통행료 안 돼'", 「헤럴드경제」, 2026.9.25; 김세훈, "미·중 'AI 안전 연락망' 텄지만 '알맹이는 없었다'", 「경향신문」, 2026.9.27.

반면 군사 분야의 AI 규범을 다루는 다자 논의는 힘을 잃고 있다. 2024년 서울에서 열린 '군사 분야 AI의 책임 있는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60여 개국이 행동 청사진을 지지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 문서를 지지하지 않았다. 2년 뒤인 2026년 2월 스페인 아코루냐 회의에서는 지지가 더 줄었다. 참석한 85개국 가운데 35개국만 결과 문서에 서명했다. 중국은 이번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미국도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 문서에 서명했다.[11]

이 흐름을 정리하면 하나의 차이가 드러난다. 최근 진영을 넘어선 합의는 APEC과 미중 양자 대화에서 나왔다. 그 의제는 성장과 역량 강화처럼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사고 소통과 인간 통제처럼 범위가 좁은 것이었다. 반대로 공급망 협력에서는 진영이 굳어졌다. 포괄적인 군사 규범 논의에서도 서명국이 줄었다. 합의가 가능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갈린 것이다. 동북아 AI 거버넌스는 이 차이에서 출발해야 한다.

Ⅲ. 왜 동북아인가?: 군사 대치와 진영 경계가 겹치는 곳

동북아에 AI 거버넌스가 필요한 첫째 이유는 군사적 위험이다. 동북아에는 북핵 문제와 미중 전략경쟁, 양안 갈등이 겹쳐 있다. 여기에 AI가 군사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6년 2월 노동당 제9차 대회 보고에서 AI 무인공격체 개발을 새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에 포함했다. 북한의 AI 수준은 아직 선진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고 평가되지만,[12] AI 위험은 기술 수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미숙한 AI가 군사적 판단에 쓰이면 오인과 오판의 위험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또 AI가 결정의 속도를 높일수록 판단을 바로잡을 시간은 줄어든다. 그런데도 이 지역의 군사적 AI 위험을 다룰 역내 협의 장치는 아직 없다. 앞서 보았듯이 REAIM 결과 문서에는 미국과 중국이 모두 빠져 있다.

둘째 이유는 진영 너머와 소통할 통로가 비어 있다는 점이다. 한·미·일 3국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첨단기술을 포함한 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중국은 이를 역외 세력이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13] 이처럼 AI를 포함한 기술 협력은 한쪽 진영 안에서 두터워지고 있다. 하지만 두 진영이 맞닿은 곳에 있는 나라일수록 위기 때 상대 진영과 연락할 통로가 더 절실하다.

셋째 이유는 국경을 넘는 사이버 위협이다. 앞서 본 금융권 해킹에서 공격자는 여러 나라의 IP를 바꿔 가며 7개 금융사를 노렸다. 이러한 공격은 한 기관이 먼저 파악한 위협 정보를 다른 기관과 빨리 나눌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같은 원리는 국가 사이에도 적용된다. 경제와 통신망이 얽힌 인접국일수록 위협 정보를 나누는 협력이 더 필요하다.

---

11) Victoria Waldersee, "US, China opt out of joint declaration on AI use in military", *Reuters*, 2026.2.5.

12) 남빛나라, "김정은 '수중발사 ICBM·AI 무인공격체 개발'…핵-재래식 병진 구체화(종합)", 「뉴시스」, 2026.2.26; 정영, "김민정 센터장 '북한 AI, 핵 개발처럼 봐야…'", 「자유아시아방송(RFA)」, 2026.6.19.

13) 임진수, "中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 반발…서해·대만해협서 군사훈련", 「노컷뉴스」, 2023.8.21.

Ⅳ. 좁지만 확실한 협력: 진영을 넘는 AI 위험 관리

그러나 협력의 조건은 좋지 않다. 2025년 11월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중일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중국은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연기했고, 일본이 추진한 한·중·일 정상회의에도 응하지 않았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24년 5월 서울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2026년 1월 일본을 겨냥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까지 시행했다.[14]

미국 변수도 있다. 미국은 동맹국이 양쪽 협의체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경계한다. 서한 초안의 문구가 중국과 무관한 병행 협력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15] 더구나 AI는 그 자체가 안보·기술 경쟁의 핵심이다. 그래서 AI를 협력 의제로 올리는 순간 안보 문제로 다뤄지기 쉽다. 그렇다면 협력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현실적이다. 사고 통보와 위협 정보 공유는 특정 진영의 기술이나 가치를 앞세우지 않는다. 군사적 결정에서 인간의 통제를 확인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미국 스스로도 중국과 AI사고 소통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 따라서 이 범위의 협력이 미국의 기대와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한국은 이 판단을 미국과 먼저 공유해 오해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

중국도 같은 방향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26년 7월 세계인공지능대회(WAIC) 개막 연설에서 AI를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대회의 의장성명은 AI 악용에 대비해 국가 간 위기관리와 비상대응 체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의장성명은 여기에 더해 AI 에이전트의 결정 권한과 행동 범위를 명확히 하자고 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이 함께 발표한 「AI 협력 발전 행동계획」도 사이버위협 정보와 대응 경험을 공유하자는 과제를 담았다. 물론 중국의 입장에는 미국에 대한 견제도 담겨 있다. 시진핑 주석은 AI 분야에서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데 반대했다.[16]

새로운 위험에서는 진영을 넘는 공통분모도 보인다.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AI 에이전트가 대표적이다. 싱가포르는 2026년 1월 에이전트 AI 거버넌스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사람이 AI 에이전트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17] 이는 앞서 본 중국 의장성명과 비슷한 문제의식이다. 팍스 실리카 회원국인 싱가포르와 WAICO를 이끄는 중국이 같은 위험을 비슷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셈이다.

14) 김지헌, "'일본, 내년 1월 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의 개최 타진…중국이 거부 중'", 「헤럴드경제」, 2025.11.22; 김수정, "팍스 실리카(Pax Silica) 출범과 핵심광물 공급망 혁신방안", 『이슈와 논점』 제2471호 (국회입법조사처, 2026).

15) Douglas A. Rediker, "Middle power AI agency: Preserving choi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Brookings, 2026.9.8.

16) 정훈규, "시진핑 'AI는 국제 협력의 교향곡' … 美 기술견제 우회 비판", 「뉴데일리」, 2026.7.17;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中, 세계AI협력기구(WAICO) 출범, AI 국제협력 실행계획 동시 공개", 『차이나 사이언스』 정책동향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2026); 박소희, "2026년 세계AI컨퍼런스(WAIC 2026)로 본 중국의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상",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26).

17) 안유나, "싱가포르의 에이전트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발표 내용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26); Allen & Gledhill, "Singapore launches new Model AI Governance Framework for Agentic AI", 2026.2.13.

이러한 접근은 최근의 국내외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큰 틀의 다자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새로운 중앙 기구보다 기존 협의체를 강화하는 편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있다. 정치 쟁점과 분리해 AI사고 정보를 나누는 조기경보 체계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다만, 이 제안은 쿼드나 AUKUS 같은 동맹 내부의 협력을 상정했다.[18] 국내에서는 한국이 중국과도 공동의 AI 위험을 줄이는 제한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반도에서는 AI가 만든 허위조작정보나 AI 시스템의 잘못된 판단이 위기 때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19] 두 제안은 각각 동맹 내부와 한중 양자 관계에 머문다. 동북아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영을 넘는 다자 차원의 위험 관리 협력이 필요하다.

Ⅴ. 한국의 과제: 경계선 위에서 위기를 관리하는 네 가지 방안

동북아 AI 거버넌스는 위기 때 소통하고 오판을 막는 데서 출발한다. 그 과정에서 쌓인 협력의 경험은 다음 협력의 토대가 된다. 궁극적인 목표는 역내 긴장을 낮추고 갈등이 무력 충돌로 번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공급망·기술 협력과 위험관리 협력을 구분해야 한다. 한국은 팍스 실리카 참여국으로서 공급망 협력에 대한 미국의 기대를 존중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협력을 같은 잣대로 볼 필요는 없다. 사고 통보와 위협 정보 공유, 인간 통제 원칙 같은 위험관리 의제는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한국은 이 구분의 기준을 미국과 협력국들에 미리 설명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 중복 참여 논란이 일어나도 협력의 공간을 지킬 수 있다.

둘째, 기존 지역 협의체에 AI 위험관리 의제를 넣어야 한다. 2026년 APEC 의장국은 중국이다. 한국은 2025년 경주 APEC의 의장국이었던 만큼 중국이 주재하는 APEC 논의와 그 후속 협의에 AI 사고 대응과 위협 정보 공유를 의제로 제안할 수 있다. 한·중·일 협력이 재개된다면 3국은 재난·안전 협력에 AI 안전을 포함할 수 있다. 싱가포르와 중국이 모두 주목한 AI 에이전트의 관리 방식도 다룰 만한 의제다.

셋째, AI를 악용한 사이버 위협 정보를 역내에서 공유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 기구를 만들 필요는 없다. 한·중·일의 침해사고 대응 기관은 이미 아시아·태평양 침해사고대응팀 협의체(APCERT)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3국은 이 협력망을 활용해 AI를 이용한 공격 기법과 위협 정보를 신속히 나눌 수 있다. 다만, 정보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앞서 본 미중 합의처럼 통보 기준이 없으면 통로가 있어도 제때 쓰이기 어렵다. 또 AI가 위협을 탐지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사람이 내려야 한다. 따라서 정보 공유 절차에는 어떤 사고를 언제 알리고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함께 담겨야 한다.

---

18) Huw Roberts, Emmie Hine, Mariarosaria Taddeo and Luciano Floridi, "Global AI Governance: Barriers and Pathways Forward", *International Affairs* 100(3), 2024, pp.1275-1286; Renan Araujo, "The Indo-Pacific and the Challenge of Multilateral AI Governance", *NBR*, 2026.5.12.

19) 송태은, "미국의 'Super Intelligence' 용어 채택의 전략적 의미와 미·중 AI 위험관리 협력 논의의 외교정책적 함의" (국립외교원, 2026); 박지현, "[리뷰] 美·中, AI 경쟁 속 제한적 위험관리 모색…韓 대응 과제는?", 「서울평양뉴스」, 2026.10.12.

넷째, 군사 AI 신뢰구축조치를 1.5트랙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 정부 간 협의가 막혀 있을 때는 정부와 민간 인사가 함께하는 대화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국제분쟁협력연구소(IGCC)가 1993년부터 운영해 온 동북아협력대화(NEACD)가 좋은 예이다. NEACD는 정부 간 협의가 막힌 시기에도 대화를 이어 왔다.[20] 한국은 REAIM을 공동 주최했고 2026년 결과 문서에도 서명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1.5트랙 대화에서 군사 분야 AI 운용의 인간 통제 원칙과 군사 사고 통보 절차를 먼저 제안할 수 있다. 북한의 참여는 당장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역내 국가 사이의 절차가 먼저 갖춰져야 장차 북한을 포함하는 논의의 토대도 생긴다.

국제 AI 거버넌스의 분절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에서 진영의 경계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경계를 지울 수 없다면 동북아 국가들은 그 경계선 위에서라도 위기를 함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사고를 알리고 오판을 막는 장치는 작은 사고가 무력 충돌로 번질 위험을 줄인다. 이는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 즉 소극적 평화를 지키는 일이다. 냉전기 미국과 소련이 핫라인을 만든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위기를 함께 관리한 경험이 쌓이면 갈등을 대화로 다룰 기반도 생긴다. 나아가 협력이 AI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데까지 이어진다면 동북아는 삶의 조건을 함께 높이는 적극적 평화에도 다가갈 수 있다. 한국 정부가 2026년 9월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상도 이런 방향과 맞닿아 있다. 진영 선택의 압박이 커질수록 경계선 위의 협력은 동북아의 안정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다.

20) IGCC, "The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Three Decades of Track 1.5 Diplomacy".

저자 소개 :

문인철(서울연구원 AI빅데이터랩 연구위원)

현재 서울연구원 AI빅데이터랩 연구위원이다. 성균관대학교에서 국제정치 전공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을 지냈다. 현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와 평화, 남북관계와 대북·통일 정책을 연구해 왔으며, 남북 이산가족과 북한이탈주민 문제도 꾸준히 다뤄 왔다. 더불어 사이버 안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부문의 AI 윤리와 AI 거버넌스를 연구하고 있다.

2026년 11월

저작권자 © 제주평화연구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